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 종합 토론 요지

# 04

※ 시간관계상 모든 토론자의 원고를 신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좌장 - 김용웅 前.충남발전연구원장]

수도권 규제시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 수단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번영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경제 및 발전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별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자원과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발전 잠재력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도시와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발전 잠재력은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장소적 고착성이 강하여 세계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국내 모든 지역이 자기만의 발전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지역들이 한정된 자원의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장과 집중은 수도권 자체의 생산성 약화와 함께 지역 간 보완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시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밀 피해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시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이해집단의 반발과 단기적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몰려 실질적 규제력을 잃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와 친 기업주의를 표방한 MB정부 취임 이후 장기적 국토공간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시책은 존재마저 위협 받고 있다.

그동안 MB정부에 의한 수도권 규제시책 완화 조치로 인하여 핵심적 규제수단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40여년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시책의 철폐내지는 완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자생적 발전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고착시켜 수도권의 경쟁력만 약화 시키게 된다. 수도권 규제시책은 지방발전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부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 시책을 완화 또는 무력화시키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회복불능의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 조치는 막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시책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외국의 “대도시권성장관리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조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적 통제수단의 마련 없이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성장과 과밀을 막는 일은 지방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 [토론 -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산술적 균형과 지역 안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하면서,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중앙집권적 시혜 대신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역발전위원회 2008 자료 참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동적인 균형이나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오늘 세 분의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 대부분이 무력화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도권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등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수도권도 다른 광역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광역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의 절반, 각종 중추관리 기능과 자본의 2/3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을 단순히 하나의 광역권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권은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재원의 부족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먼저 수도권 규제가 폐지된다면, 수도권 지역으로 자본과 인재의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 토대 구축이 선행된 이후에 수도권 규제의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규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 고령화와 잠재 성장률 저하 추이, 산업구조의 전환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거시적 변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규제의 논리와 규제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현재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됨)를 조속히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연구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나아가 입법화·제도화 시켜야 한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불가능하다면, 곧 닥칠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이슈화시켜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여기에 수도권 규제 정책을 수단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즉 수도권 규제 정책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정책을 연계 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의 대폭적 지방 이양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한 지방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 [토론 - 대전발전연구원 김홍태 도시기반연구실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지만 규모의 경제의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황폐화되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수도권은 물론 지방경제를 위한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수도권 지역의 환경파괴, 인구집중, 교통문제 등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는 만큼 재투자를 해야 함을 말한다.

지방이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지방도 수도권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21세기형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동반성장 하자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당위성 제시가 필요한 것이며, 이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고, 추진되는 균형 선도 도시로 세종시(행정/공공), 혁신도시(기능/공공+민간), 기업도시(산업/민간)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은 무엇보다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우선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며, 국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이상선 공동대표]

- 3편의 발제 내용,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현상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이를 둘러싼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책과 기초의 대비 및 제시된 대안 등의 논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당위론에 치중하여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전술 또는 전략적 실행과제 도출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굳이 지적하고자 함.
  - 균형발전, 수도권과밀해소 및 비수도권 육성을 위한 균형 선도도시(pilot cities)가 광역경제권 도시들 간의 기능별 연계도시(Network Cities) 구축을 선도하는 기능유도< ‘권’ > ,
  - 수도권집중과 지역적 격차의 이론적 관계를 수렴론과 확산론으로 구별하고 선행연구, 실증분석, 변화추이, 상관관계의 제시와 수도권규제의 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와 변화 국가균형지표 및 공시제도 도입< ‘이’ > ,
  -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도권-비수도권이나 시도별 균형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할 필요성, 수도권규제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와 수정법 등 무력화 대응을 위해 2012선거의제화의 필요성< ‘변’ > ,
    - ⇒ 각각의 주장과 제안은 대단히 유의미하며 상호보완의 전략적 과제로서 정립할 필요
    - ⇒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론 차용의 무적합성
  
- 경험적 단견(단상)
  - 현 상황(세종시, 과학벨트거점, 대덕특구, 충남북부벨트와 오송·오창, 음성진천 혁신도시 등)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충청의 생존’ 과 같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아닌 ‘수도권 대 충청권’ 구도 설정은 재고할 필요
  - 충청권 주도로 현재 유명무실한 ‘균형발전협의체’ (13+13) 추동하여 전선 확장, 혁신도시와의 연대 강화
  - 용어사용의 재고
    - ‘수도권과밀, 수도권규제’ 등의 네거티브 어감보다 ‘수도권(과·초)집중, 수도권집중해소’ 등
    - ‘수도권\*\*’ 용어사용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의 사용빈도 제고 검토
  - 수도권과 균형발전의제와 대응을 위한 상설적 민관정 네트워크 조직
    - 기관 독자 대응의 한계
    - 일관성, 통일성, 지속성을 위한 HQ설정과 기능 필요

- 2012총선과 대선의 주요 선거의제(2002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유력대선후보 3인과의 정책협약은 소위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2003.12.29 제정의 결정적 계기)

■ ‘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 동향자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연대 조직 - 가칭 『**균형발전·분권 국민회의**』 추진

1. 취지와 배경

- 주민의 결정권을 제고하는 주민자치, 지역의 자립과 자율권을 제고하는 지방자치 활성화 도모
- 개발독제와 압축성장시대의 수도권중심의 일극발전전략에서 초)광역차원의 다극적 발전전략으로 전환
- 과도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인구, 교통, 주거, 환경 등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 극복
- 중앙집권과 수도권과밀집중 구조에서 분권, 분산, 분업형 구조로 국가운영체계 전환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더 체계적, 집중적, 중·장기적 대응과 활동 도모 (기존의 관련 연대단위들을 통합, 계승하고 더 확대하여 조직)

2. 목표

- 풀뿌리 주민자치를 비롯한 주민주체의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치행정적 분권, 경제산업적 분산·분업, 문화사회적 분화, 자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 마련 추진
- 관련 의제와 정책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 활동

3. 주요 의제(예시)

-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형 개헌 내용 명기 (프랑스의 경우 2003년 헌법 개정에서 분권형 국가라는 내용 등 명기)

##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 지방행정체제 개편
  - 현 정부와 정치권 다수가 의도하고 있는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시군) 통합과 광역시도의 폐지 또는 기능약화를 통한 단일 자치계층 시도(현재는 2단계 자치계층) -중앙집권기능 강화 의도- 에 대한 시급한 대응
  - 분권형 광역지방정부(균형발전과 결정권 부여의 적정 규모단위)와 풀뿌리 주민자치(대도시의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위 개편)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통합 :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통합
-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실현
-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권한 배분
  -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정부 이양 및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 권한 배분
- 과세자주권 강화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비율 8:2를 획기적 개선
- 지역금융 기능의 활성화
- 기초지방정부 선거(구청장, 군수 및 구군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풀뿌리 자치 활성화
- 세종시와 혁신도시(전국 10개 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 부자감세 철회, 중부세 부활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도, 농간 등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주거, 복지, 교육 등 양극화 해소
- 대규모 국책사업의 남발과 갈등조장(지역분열) 대응 등

#### 4. '균형발전·분권국민회의' 의 기본성격과 체계 및 결성 경로

- 경과
  - 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세 단위에서 각각 내부논의를 거쳐 참가단체의 일정한 중복, 활동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통합조직의 성격, 운영체계 등 출범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세 단체 연석 집행위원회에서 논의·추진 중임.
  - 1차(3/23. 대전), 2차(4/20. 대구), 3차(5/25. 대전)의 회의를 개최(4차 춘천 예정)

- 조직의 성격
  -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참여 주체를 넓히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형식의 조직으로 설정
  - 단체(지역, 부문 등)와 개인의 참여를 모두 허용(단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개인의 참여를 허용)
  - 단, 시민사회단체의 위상과 역할인 만큼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제도정치권과 공직자 및 관련단체 등의 직접적 참여는 제하되 필요한 연계를 고려한 방법은 추후 검토
- 체계 및 운영
  - 조직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결 및 집행단위를 단일화 하고 체계를 단순화
  - 기본적인 의결·집행기구로 네트워크 참여 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 (구체적인 조직체계상 명칭은 추후 논의; 일단 ‘전체회의’ 로 기술) 운영
  - 참여단위의 규모와 형태(연대단체, 개별단체 등)에 따른 의결 및 집행구조 참여방식은 대표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단체의 경우 ‘전체회의’ 에 복수로 참여 가능(지역차원의 경우 광역단위 별로 협의구조를 지향해나감)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지역과 부문을 고려, 10인 이내로 두며 상임대표는 별도로 두지 않음), 상임집행위원장(1인), 공동집행위원장(지역과 부문을 고려 20인 이내로 둠), 공동사무국(1안-일정한 지역권역별을 중심으로 공동사무국을 두고 주 사무국은 수도권단체에 운영, 2안-수도권과 비 수도권 두 곳에 공동사무국 운영; 최종 운영방안은 조건과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 논의하기로 함)
  - 사업추진시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장, 사무국이 일상적으로 소통
  -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 등 유연하게 개최
  - 재정은 참가단체 월, 또는 연회비(월 1만원 기준) 및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의 일정 회비(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논의), 기타 후원, 지원 등으로 운영
- 출범 일정
  - 5/23. 3차 회의 이후 6-7월까지 기존 참여단체외에 지역과 부문 단위 등에서 최대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및 조직 (시민사회연대 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회 등 설명, 간담회 및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적극 조직 등)
  - 6~7월에 1~2회의 연석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출범상황을 점검
  - 8월에 조직결성, 출범에 따른 워크숍 개최
  - 9월에 출범

## [토론 -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

수도권 집중 억제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심화되고, 억제에 대한 저항 압력이 때 마다 불거져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합리적,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수도권만큼 사업성과 시장성의 기회가 크고, 양질의 인력과 투자자본이 풍부하고, 산업생태계가 잘 성숙돼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며, 여건이 좋지 않고, 그나마 혜택마저 불확실한 지방투자보다는 보다 확실한 수도권 투자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임금 등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3국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규제 완화 시도를 망국적 이기주의로만 매도하는 것은 생산적인 대안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수도권은 한국 시장경제의 중심지, 지방은 변방. 중심지 집중과 과밀은 시장경제의 당연한 결과다. 수도권이 다방면에서 집중도가 높은 것을 굳이 분석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권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다.

균형의 개념은 매우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어느 국가든 수도와 지방간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격차 문제는 각 권역의 인구와 산업 집중도가 개인의 고용과 소득 안정, 교육기회와 발전기회를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반영된 중심지의 조세 재원이 지방의 복지재원으로 재분배되지 않는 구조에 있으며, 지방의 중심지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향수도 불편한 진실의 한 원인인 듯하다.

수도권 과밀비용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 것인가? 교통, 주택, 교육, 환경 문제 등 구조적 불편과 투기적인 정책간의 교섭을 통한 지루하고 단편적 학습효과만 존재하게 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난 정권의 행정수도 공약과 같이 국민적 선택에 의존하는 혁명적인 승부수 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일 듯하다. 다만, 혁신정책의 임기응변식 돌출보다는 오랜 공론화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권역들은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격차 확대를 근거로 규제완화 반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공동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비수도권들이 분립된 개별 경제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비수도권 전체를 공동의 독자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성장극 대안이 필요한 현실이다. 균형 선도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하더라도 그 중심지가 여전히 수도권이 된다면 무망한 미래다.

수도권 이남에서 세종시 대도시권과 경부축-호남축-남해안축을 잇는 제2의 성장극으로서의 삼각축 경제권 형성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성장극 형성의 선도요인으로 값싸고 효율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철도투자가 지역융합을 위한 핵심투자요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국제적인 기업입지여건 마련을 위해 남부권 신공항은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 시정을 위한 국제적인 부품소재산업단지의 조성 및 육성이 제2성장극 대안의 하나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 수권 희망세력들이 동반성장, 균형발전에 대한 독트린(doctrine)을 확고하게 수용하도록 국민적 주의환기를 위한 활발한 담론 전개가 필요할 듯하다.

## [토론 -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래 대도시 집중,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50년이 지난 현재도 대도시, 수도권의 집중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다.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고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던 참여정부조차 정권후기에 수도권 규제에 예외의 특례를 부여하는 수도권 정책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정비발전지구, 평택지원특별법, 공여구역특별법,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수도권규제의 특례를 받는 지역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가 빛을 많이 바랬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의 자생적 발전역량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방발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맞추어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권용우 교수의 표현을 따르자면 균형선도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이다. 차질 없는 건설은 단순히 건설추진계획대로 건물과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정주환경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에 124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관 통폐합에 따라 이전규모가 다소 축소되었다. 전주혁신도시의 경우처럼 이전 예정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이 불투명한 지역을 위해 2005년 이후에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요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관을 박사가 제안한 지방의 자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지표를 개발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국가균형지표의 공간적 단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로 나누는 것 보다는 변창훈 교수가 제안한 광역경제권간의 균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구심점의 부재로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2008년을 피크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지방의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국책사업 유치경쟁에 따른 지방분열).

수도권 관련 정책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학·연·관·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사회실태조사, 대응 논리개발 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설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광역지자체의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재원마련과 책임성 강화, 산하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실행 가능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각종 선거에서 이슈화 할 수 있는 정책 공약화가 필요하다.